

# 가계부채가 소득수준별 소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남상호

본 연구에서는 가계부채가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2010~2016년 기간에 대하여 불균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가계부채의 소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Pareto 분포함수를 이용하여 부채의 분포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파레토 분포는 부채의 실증분포와 다소의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좀 더 유연한 함수를 이용한 분포함수의 추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소득변수는 소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소득계층별로도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가계부채-순자산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나타내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엄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가계부채의 영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분석도구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이자율의 상승이나 자산가격의 변동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선제적으로 구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shnam9@gmail.com).

특종이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실업이나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위험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sup>4)</sup>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가계부채의 현황을 개관하고, 가계부채가 소득계층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다음,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연구의 방법

표준적인 경제학 교과서에 의하면 가계부채의 증가는 단기간에 걸쳐서 시점간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소비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금융시장에서의 차입이 가능하다면 미래의 자원을 현재시점에서 앞당겨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곧 현 시점에서의 예산집합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일정한 거치기간이 지나면 차입액을 변제해야 하는데, 상환시점에서는 오히려 채무상환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소비를 억제해야하는 요인이 된다. 거시적인 측면에서도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경제의 거시적 안정성을 낮추게 된다.<sup>5)</sup> 또 부채수준이 높아지면 경기회복이 늦어지는 문제도 생기는데, 가계부채가 급리인상이나 외부로부터의 예상하지 못한 충격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소비를 통하여 흡수하게 되면 경기회복의 가능성이 낮아지거나(OECD 2012, p. 5), 이자저금으로 인한 부담이 차입의 유동성 증대 효과를 넘어선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나승호 외 2013, pp. 14-15).

가계부채의 급증은 각종 위기설과 결부되면서 가계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킨다. 그동안 우리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각종 위기설은 오래가지 않고 사라진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계부채 만큼은 꾸준히 회자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가 처음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때는 2002년의 신용카드사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계부채발 위기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계부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 3. 선행 연구의 소개

최광원 외(2002)는 우리나라 가계부채에 대한 초창기의 연구에 속한다. 가계부채는 단기적으로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높이고, 경기침체기에 소비 평활화와 자산가격 지지에 기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효과가 사라지게 된다고 한다. 부채를 감내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는 경제성장, 부채규모, 금리수준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채의 규모가 경제성장률에 부담을 줄 정도로 높아지면 이를 조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4) 반면 자산가격의 하락은 이들에게 큰 충격이 될 수 있다.

5) 정책당국의 입장에서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한국은행은 년 2회 금융안정보고서를 일정에 제출하고 있다.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저금리 기조의 지속과 주택시장 호조에 힘입어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둔화되고, 금융 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우려의 소리가 높다.

2016년 3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1,224조원에 달하며, 2014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계속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sup>1)</sup> 가계부채의 처분가능소득에 대한 비율 또한 2016년 1/4분기 기준으로 약 1.46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전년 동기의 1.38에 비하여 더 높아진 수준이다. 특히 이 비율은 2014년 하반기 이후 소득증가의 부진에 가계부채 증가세의 확대에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부채의 명목GDP에 대한 비율은 2015년 12월 기준으로 91.3%를 나타내고 있는데, 동년 6월 이후부터 장기추세치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의 경험에 따르면 이러한 양(+)의 갭이 누적되면 위기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 1996년 외환위기 또는 2001년 신용카드 대란과 같은 금융 불안이나 경기침체 이전에 가계부채의 명목GDP에 대한 비율이 추세선보다 위에서 장기간 머물렀던 경험이 있다.<sup>2)</sup>

과거 선진국의 경우에서 가계부채의 부채가 급증한 이유는 주로 주택담보 대출의 증가가 주원인이었는데,<sup>3)</sup>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이유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주택구입에 대한 세금공제 제도의 확대, 둘째는 80년대부터 지속된 각종 금융규제의 완화, 그리고 셋째는 20여년에 걸친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이다.

지난 해 말을 기준으로 할 때 가계 금융부채의 금융자산 대비 비율은 0.45로 금융자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현재의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 가계부채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증가할 가능성이 크므로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

가계부채는 유동성을 증가시켜 가계의 예산집합을 확대하므로 좀 더 높은 수준의 소비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GDP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소비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경제 흐름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가계는 소득이나 자산 보유 수준에 따라 차입한도가 결정되므로 소비지출 여력의 변화 또한 차입한도의 영향을 받게 된다. 주로 저소득 그룹에 있어서 조달된 부채는 생활비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부동산 취득과 같은 자산형성을 위한 대출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계부채의 소득계층별 분포 또한 파급효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만일 고소

1) 이러한 급격한 증가의 배경에는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은행권 가계대출 급증이 자리하고 있다.

2) 거시적 측면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에 동행하거나 1-2분기 후행하는 속성이 있다.

3) 우리나라도 대체로 이와 유사하지만 우리의 경우 과거 신용카드 남용으로 인한 부채 증가가 타래진 경험이 있다.

있음을 지적하였다. 부채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고, 향후의 경기상황에 따라 가계부채 규모의 과다로 인한 가계부채의 부실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김학주(2005)는 소득계층별로 가계부채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고, 그는 소득수준에 따라 다섯 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별 부채보유 실태를 분석하였다.<sup>4)</sup>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소득계층별 부채보유 특성을 살펴본 결과, (1) 부채부담률은 저소득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 유형별 보유현황에서는 저소득층은 사채보유 비중이 가장 높았던 반면 고소득층은 금융기관 부채비중이 높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곧 저소득층의 높은 사채의존도는 외환위기 이후에도 바뀌지 않았으며, 고소득층은 부채를 활용하여 자산증식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책제안으로는 소득보장 중심의 빈곤정책에서 탈피하여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는 전방위적 차원의 대책으로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김우영·김현정(2009)에서는 2000~2007 기간의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가계 부채를 보유한 확률은 45세 이후부터 감소하였지만 부채규모는 55세 이후부터 감소하였으며,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채 보유 확률과 부채 규모가 증가하여 생애주기시설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50세 중반의 퇴직연령에 이르기까지 부채규모 및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높게 지속되는 것은 생애주기시설과의 함의와는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2003년 이후의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 상승은 부채보유 확률 및 부채 규모와도 관련이 있었고, 서울지역 가구가 타 지역에 비하여 소득대비 부채 비율과 부채규모 모두에 있어서 더 높았다. 지역별로는 임금근로자 가구에 비하여 부채보유 확률, 부채 규모, 그리고 소득대비 부채비율 모두에서 유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이준원(2016.3)에서는 (1)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2)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하 DSR)이 40%를 초과하는 가구를 '한계가구'로 정의하였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한계가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소득과 순자산이 적고, 자영업에 종사하는 고령 가구 그룹에서 높아지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2년에는 한계가구의 규모가 132.5만 가구이었는데 2015년에는 158.3만 가구로 증가하였으며,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에서 한계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12.3%(2012년)에서 14.8%(2015년)로 높아졌다고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통하여 주택을 구매한 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가구 중에서 한계가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보다 값은 거치구보다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하고 있는 비거치구에서 한계가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거치기간이 지나면 거치구 또한 한계가구가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특징을 개관하고, 제3절에서는 가계부채가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끝으로 제4절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의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6) 최하위, 하위, 중간, 상위, 최상위의 5개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 II. 자료와 분석방법

### 1. 분석자료

한국노동패널 조사(KLIPS)는 1998년에 처음 시작하였으며, 첫째에 5,000 여 가구에 한 조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매년 추적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 조사의 표본추출 단위는 가구이며 무직자와 실업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동관련 조사 자료라고 할 수 있으며, 2016년 현재 가장 긴 자료구축기간을 자랑하는 패널조사 자료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1~18차 자료 중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노동패널조사 자료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가구와 개인 정보를 수록하지만 소득·지출·자산·부채 등의 정보는 전년도에 대상으로 조사하게 된다. 따라서 엄밀하게는 t년도의 가구 및 개인 정보와 t+1년도의 소득·지출 정보를 매치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자료만 분석에 이용하였는데,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소득과 부채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렇게 한 이유는 당년도의 월 소득자료를 이용하더라도 전년도 소득을 이용한 경우와 결과에서 차이가 없고, 가능한 한 많은 표본 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분석대상 기간 중 모든 년도에 조사가 이루어진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경우와 해마다 조사된 가구를 모두 이용하여 분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해마다 조사된 가구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불균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특이점은 분석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석에 앞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분포의 양측 극단치를 점검하였으나, 좌측은 하한이 0이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우측은 레버리지인 지 특이항인지 판단이 어려워져 다른 조정은 하지 않았다. 모든 변수는 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누어 불변화시킨 후 분석하였다. 가구원 구성을 고려하지 않고 가구원수의 제곱근을 균등화지수로 사용하는 LIS 방식의 균등화지수를 사용하는 대신, 가구원 수와 그의 제곱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LIS 방식의 균등화지수가 우리의 현실에 적합하다는 근거가 미약하였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하였다.

### 2. 분석 방법

여기서는 부채의 분포를 살펴보고, 패널 분석을 통하여 가계부채-소득 비율과 가계부채-순자산 변수의 소비에 대한 영향을 살펴본다.

### 가. Pareto 분포함수의 추정

부채 분포의 특징을 검토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모수적인 분포함수를 추정하는 것이다. 부채와 같이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행태를 보이는(exponential decay) 변수의 경우 Pareto 분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고소득 그룹의 소득분포(특히 상위소득 점유율)를 분석할 때 주로 파레토 분포를 가정하고 있다. 이 분포는 주어진 경제값에 대하여 하나의 파라미터를 가지는 분포인데, 파레토 분포(Pareto distribution)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sup>7)</sup>

$$F(x) = 1 - (x_m/x)^\alpha, x > x_m > 0, \alpha > 1$$

여기서  $x$ 는 소득,  $F(x)$ 는 이하(from below) 누적분포함수,  $x_m$ 는 주어진 상수(mode), 그리고  $\alpha$ 는 Pareto 지수이다. 한편 이에 대응하는 확률밀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f(x) = \frac{dF(x)}{dx} = \frac{\alpha x_m^\alpha}{x^{1+\alpha}}$$

이 분포의 평균과 분산은  $\alpha > 2$ 일 때  $\alpha x_m / (\alpha - 1)$ 과  $\alpha x_m^2 / ((\alpha - 1)^2 (\alpha - 2))$ 이 되고,  $1 < \alpha \leq 2$ 일 때에는 평균과 분산이 모두  $\infty$ 가 된다. 중위값은  $x_m 2^{1/\alpha}$ 이다.

### 나. 패널 분석

패널분석을 위한 기본모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y_{it} = \alpha + \beta x_{it} + \epsilon, \text{ where } \epsilon = v_i + e_{it}$$

여기서  $i(=1, \dots, N)$ 는 횡단면(패널) 구분자이고,  $t(=1, \dots, T)$ 는 시간 구분자이다.<sup>7)</sup> 패널 분석법은 기존의 pooled OLS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의 이점이 있다. 첫째, pooled OLS에서는 다룰 수 없는 패널단위간 이질성(heterogeneity)을 분석에 포함시킬 수 있다. 둘째, 시간변분의 속성을 지닌 생략된 변수를 감안할 수 있다. 셋째, 시계열자료에 비하여 계열상관(serial correlation) 또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등의 문제가 줄어든다.

패널분석에서 주로 사용하는 모형은 기본적으로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s model, FEM)과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s models, REM)의 두 가지이다. 이들 두 모형은 '이질성을 어떻게 보는가'와 '추정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고정효과 모형은 OLS를 이용하

7) 이 내용은 wikipedia의 설명을 재정리하였다. [http://en.wikipedia.org/wiki/Pareto\\_distribution#](http://en.wikipedia.org/wiki/Pareto_distribution#)

고, 확률효과 모형은 GLS를 이용한다. 고정효과 모형은 개별적인 이질성(individual heterogeneity)을 상수항에 포함시켜 분석한다. 즉, 모든 individual은 공통적인 상수항에 자신만의 고유한 절편을 더한 값을 가지게 된다. 조금 달리 표현하면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이질성을 독립변수의 하나로 인식한다. 고정효과 모형을 LSDV(least square dummy variable) estimator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할 때 각 개별그룹에 대하여 더미변수를 부여하여 추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확률효과 모형은 개별효과가 상수항( $\alpha$ )과 확률적인 성분  $v_i$ 에 들어있다고 본다. 이 확률적 성분은 독립변수들과는 무관하며 오차항의 일부로 포함된다. 확률효과 모형의 기본가정은 '개별효과가 독립변수와 상관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데, 유한표본에서는 이 가정이 충족되기 어렵다. 그러나 만일 이 가정이 충족된다면 고정효과 모형의 추정 시에 상실되었던 시간에 대해 불변인 변수들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횡단면자료에 대한 패널자료의 장점은 변수들 사이의 동태적 관계(dynamic relationship)를 명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며, 시계열자료에 대한 패널 자료의 장점은 이질성(heterogeneity)을 감안하여 분석할 수 있으므로 변수누락으로 인한 편의(bias)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추정량이 더 효율적이고,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FE, RE 모형을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에 대해 불변인 개별적 특성이 모형 내의 독립변수들과 상관관계를 가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관련이 있다면 FE, 없다면 RE 모형을 선택한다(Johnston and Di Nardo, 1997).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서 RE 모형을 추정해야 하는 경우에도 FE모형의 추정치는 여전히 일치성을 가진다.

FE, RE 모두 이상적인 모형이 되지는 못하지만 자료에 적합한 모형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각 모형의 장단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FE 모형의 가장 큰 장점은 개별적 특성의 크기를 구분하여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그런데 개별효과를 추정하는 더미변수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파다하게 자유도를 소진시키기 때문에 독립변수들에 대한 추정치가 상대적으로 덜 정확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반면 RE의 경우 더미변수를 생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독립변수에 대한 추정치는 더 정확하게 구할 수 있기는 하지만 개별적 특성이 독립변수와 선형관계를 가지지 않아야 한다는 엄격한 가정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이 가정이 충족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 어떤 모형을 써야 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필요하게 되는데, 실증분석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기준이 Hausman 검정법(Hausman specification test)이다.

귀무가설이 성립할 때 개별효과와 설명변수간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달리 직교성(orthogonality)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확률효과 모형과 고정효과 모형 모두가 일치성(consistency)을 가지는데, 확률효과 모형이 고정효과 모형보다 더 효율적인 추정량을 제공해 준다. 귀무가설이 성립하지 않을 때, 즉 개별효과가 설명변수와 상관되어 있을 때, 확률효과 모형은 일치성을 갖지 못하지만 고정효과 모형은 일치성을 가진다.

귀무가설이 성립할 때에는 두 추정치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다음의 검정통계량을 이용한다.

$$H = [b_{RE} - b_{FE}]' [V(b_{RE}) - V(RE)]^{-1} [b_{RE} - b_{FE}] \sim \chi^2(k)$$

여기서  $k$ 는 상수항을 제외한 독립변수의 개수를 나타낸다.

## III. 실증분석

### 1. 기초통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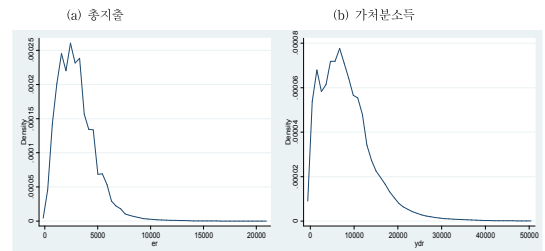
<표 1>은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과 기초통계량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기초통계량 (KLIPS)

	관찰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성별	299,225	1,493	0.5000	1	2
연령	289,216	39,910	21,221	0	101
근로소득	271,928	3,447,021	2,741,041	0	121,500
경상소득	288,629	6,501,914	15,138,08	0	3,438,920
총자산	285,537	18,412,48	32,219,97	0	1,720,000
부채	288,230	3,631,84	10,833,33	0	75,000
순자산	273,320	16,604,65	28,869,91	0	1,670,000
총지출	297,672	2,361,59	1,546,684	0	32,796
가구원수	299,225	3,6244	1,2580	1	10
부채/가치분소득	204,127	2,8399	94,7556	0	15,011.5
부채/순자산	259,484	0,8464	15,9245	0	2,000
가치분소득	206,573	7,639.3	17,916.77	0	3,438,889
총소득	288,632	6,756.98	15,271.9	0	3,438,920

주: 노동패널조사 원자료에서 계산.

<그림 1> 총지출과 가치분소득의 분포



자료: 노동패널조사 원자료



<표 7> 소득계층별 부채-소득의 소비에 대한 영향

2010~2015	빈곤층 (Fixed)	p-값	중간층	p-값	고소득층	p-값
소득	0.1171	0.000	0.1025	0.000	0.0016	0.000
연령	1.1958	0.848	29.2599	0.000	64.9499	0.000
연령 <sup>2</sup>	0.0002	0.997	-0.3501	0.000	-0.6948	0.000
부채/소득	0.5293	0.000	16.6177	0.000	-7.7673	0.517
성별	-	-	-	-	-	-
가구규모	236.2155	0.000	408.8672	0.000	740.8689	0.000
가구규모 <sup>2</sup>	-	0.000	-19.9924	0.000	-35.7522	0.000
obs	19012	-	47677	-	25209	-
F-통계량	181.20	0.000	586.69	0.000	79.80	0.000
R <sup>2</sup>	0.2711	-	0.2806	-	0.0468	-

<표 8> 소득 5분위별 부채-소득 비율의 소비에 대한 영향

2010~2015	Q1	Q2	Q3	Q4	Q5
소득	0.1524 (0.000)	0.1345 (0.000)	0.1099 (0.000)	0.1192 (0.000)	0.0004 (0.367)
연령	-10.2898 (0.386)	18.3076 (0.126)	51.5413 (0.000)	23.6581 (0.229)	67.2234 (0.008)
연령 <sup>2</sup>	0.0895 (0.301)	-0.1614 (0.163)	-0.5349 (0.001)	-0.2829 (0.202)	-0.7099 (0.012)
부채/소득	0.5682 (0.000)	9.5692 (0.055)	-21.2479 (0.069)	15.4358 (0.282)	-22.4126 (0.210)
성별	-	-	-	-	-
가구규모	265.8595 (0.000)	434.4691 (0.000)	593.2124 (0.000)	579.0218 (0.000)	721.3231 (0.000)
가구규모 <sup>2</sup>	-2.8840 (0.704)	-27.7192 (0.001)	-62.7653 (0.000)	-29.8948 (0.026)	-32.7313 (0.091)
obs	10624	10667	11373	11535	11127
F-통계량	124.30	89.40	43.41	67.76	32.38
R <sup>2</sup>	0.2768	0.1928	0.0806	0.1648	0.0577

주: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할 결과임

다음으로 부채-순자산의 소비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자. Hausman 검정은 고정효과 모형을 선호하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부채-순자산 변수는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얻어진 배경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그룹을 분리 하였고 때문일 수도 있어서 자산을 기준으로 구분한 다음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 9> 소득계층별 부채-순자산의 소비에 대한 영향

2010~2015	빈곤층 (Fixed)	p-값	중간층	p-값	고소득층	p-값
소득	0.1192	0.000	0.1004	0.000	0.0012	0.003
연령	13.0954	0.062	33.0457	0.000	65.7683	0.000
연령 <sup>2</sup>	-0.0791	0.138	-0.3816	0.000	-0.6691	0.000
부채/순자산	-1.1984	0.291	-0.0649	0.878	-0.8221	0.687
성별	-	-	-	-	-	-
가구규모	186.2702	0.000	495.6193	0.000	869.2977	0.000
가구규모 <sup>2</sup>	4.2104	0.457	-34.3514	0.000	-52.9337	0.000
obs	16,934	-	44,337	-	24,200	-
F-통계량	3059.00	0.000	533.30	0.000	76.64	0.000
R <sup>2</sup>	0.2665	-	0.2652	-	0.0423	-

IV. 요약 및 시사점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부담률은 저소득층에서 가장 높으며, 부채유형별 보유 현황에서는 저소득층의 사채보유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고소득층은 금융기관 부채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특징을 감안할 때, 향후 정부의 가계부채에 대한 정책은 가구별 특성에 맞추어 설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가계는 근로소득이 주된 수입원을 이루고 있다. 만약 외부적인 충격으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게 되면 현재소득의 대부분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의 기대소득 또한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가계부채 수준이 높을수록 실업(또는 실업률 상승)으로 인한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확대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부채규모가 큰 가계는 대출 상환의 어려움이 높아지면서 점차 한계가구에 진입하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채무불이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약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가계가 실업에 직면하였을 때 소득위험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가격의 변화로 인한 위험을 높인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차입가계의 대출규모는 줄어들지 않으므로 채무불이행 가능성은 더 높아지게 되며, 이러한 채무불이행의 확대는 경제 전체의 금융시스템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자를 변화의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이자율에 대한 위험 노출 정도는 대출이 고정금리인지 아니면 변동금리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변동금리부 가계대출의 경우가 고정금리인 경우보다 이자율 상승에 대한 위험이 더 크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상위소득계층의 절대 다수가 차입을 통한 부동산 취득이 강력한 재산증식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한 가계부채의 누증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믿음을 분식시키고 향후 주택가격의 하락에 사전적으로 대비하고자 한다면 주택부문의 거래활성화를 통한 경기진작책은 조심스럽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저성장과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진전된다는 전제 하에서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간의

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향후 전망을 통하여 가계부채가 향후 사회경제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꾸준히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정책대상으로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그룹은 부채 과부담 가구일 것이다. 특히 저소득 가구 그룹에 대해서는 정책적 차원에서 안정적인 소득 획득 활동을 통하여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무리한 차입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와 같이 소득획득 기반이 열악한 자산 및 부채 동시 보유가구의 경우 금리인상이나 주택가격의 급락 등에 노출되는 경우 부실의 위험성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연결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물부문과 금융부분을 연계시키는 모형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측면에서 가계부채 수준과 증가속도 등을 관리하여 거시금융안정성을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미시적 측면에서 가계의 부실위험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계부문의 부채문제에 특화된 별도의 동태적 Micro-simulation 모형을 구축하여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좀 더 정교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동시에 보다 효과적인 정책대안의 도출이 가능해 질 것이다. 부채 과부담 가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높아져야 할 것이다. 이자 및 원금 상황으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적절한 소비생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GDP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소비수요의 부진으로 장기적인 경제성장 잠재력이 낮아지게 된다. 더 늦기 전에 비차입가구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부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정원, 최원자, 2002, 소득탄력성을 통해 본 도시가계의 소비지출양식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3(4), 209-232.  
 김지영(2015), “고령층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 『KDI 연구논설』, 11월.  
 김학주(2005), “소득계층별 가계의 부채부담 연구”, 『사회보장연구』 21(1), 119-147.  
 김원경(2010), “가계부채의 현황 및 진단과 분석”, 한국의 가계대출, 과연 안전한가?, 한국경제포럼 3(3), 77-94.  
 김원경, 김우영(2009),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미시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은행 『경제분석』 15(3), 1-36.  
 김원경-손종철-이동원-임원준-나승호(2013),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증가 원인 및 지속가능성 분석”, 한국은행 『경제리뷰』 No. 2013-5.  
 나승호, 정찬수, 임준현(2013), 구조적 소비계약 요인 및 정책과제, BOK 경제리뷰, 3월.  
 남상호, 문석웅, 이경진(2012),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2-55-2.  
 남상호, 임병진, 2008, 소득·소비 분배구조 추이 및 양극화 분석, 『경제학연구』 56(1).  
 반경로, 김경희, 2008, 근로빈곤가구의 소비특성과 소비패턴 결정요인, 『사회보장연구』 24(3), 1-28.  
 신동진(2013), “가계부채의 현황과 대응방안” 국회예산정책처 『경제현안분석』 제82호.  
 유승선(2008), “가계부채가 가계의 소비, 주택 및 순금융자산 수요에 미치는 영향”, 국회예산정책처, 12월.  
 윤기중, 2002, 가계소비의 불평등, 『연세경제연구』, 9(1), pp. 27-56.  
 이소경, 2009, 저소득 가구의 소비패턴과 경제적 복지의 안정성, 『사회보장연구』, 25(3), pp. 317-336.  
 이준협(2016), “가계부채 한계가구의 특징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정영숙(2006), “가계부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거시경제 요인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19(6), 2483-2504.  
 정인환(2014), “가계부채가 소비부진에 미치는 영향.” 『KIET 산업경제』, 7월.  
 조경아, 2011, 한국도시가구의 소비패턴과 소비불평등에 관한 연구, 『제3회 재정패널학술대회』.  
 최공필, 이병범, 이병윤, 한상인(2002), “최근 가계금융부채의 현황과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보고서』, 각 년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홈페이지』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매년 6월 및 12월.

Atkinson, Anthony B, F. Bourguignon, and C. Morrison, 1992, Empirical Studies of Earnings Mobility, Fundamentals in Pure and Applied Economics, *Harwood Academic Publishers*, Chur.

Jenkins, S., Modelling Household Income Dynamics, 2000, *J of Population Economics*, 20007735.

Jones, Randall S., and Myungkyoo Kim (2014), "Addressing High Household Debt in Korea," OECD Working Paper No. 1164.

Johnston, Jack, and John DiNardo, 1997, *Econometric Methods*, Fourth Edition, NY: McGraw-Hill.

Karasulu, Meral(2008), "Stress Testing Household Debt in Korea," IMF Working paper 08/255, November.

OECD(2012), "Debt and Macroeconomic Stability," OECD Economics Department Policy Notes, No. 16, January 2013.

Shorrocks, A. F., 1978, "Income inequality and income mobility", *Journal of Economic Theory* 19, pp. 376-93.

Van Kern P., 2002. "Tools for income mobility analysis," *Dutch-German Stata Users' Group Meetings* 2002, Maastricht.

van Kern, Philippe, 2004, What Lies behind Income Mobility? Reranking and Distributional Change in Belgium, Western Germany and the USA, *Economica. New Series*, 71(282), May, 223-239.

**부록: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와의 비교**

다음은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자산·부채 현황을 연령계층별로 분포를 살펴본 것이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가구의 평균부채 규모는 6,181만원이며, 60세 이전에는 부채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60세 이후에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채의 경우 핵심 수요계층은 40~49세, 50~59세, 30~39세 그룹이며, 이들이 자산축적 연령대에 해당한다. 이들은 50대 후반까지 꾸준히 자산을 축적하였다가 은퇴 이후 실물자산을 처분하여 부채를 상환하게 된다.

<표 A-1> 가계부채의 연령대별 소득·자산·부채 현황(전체가구)

	전체	~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가구분포(%)	100.0	2.3	16.6	25.8	25.5	29.7
경상소득(만원)	4,767	3,429	24,007	5,674	5,964	2,884
자산액(만원)	34,246	8,998	24,007	33,175	42,229	36,042
부채액(만원)	6,181	1,506	5,323	7,103	7,896	4,785
연간 지급이자 및 상환액(만원)	952	302	1,042	1,179	1,148	587
순자산액(만원)	28,065	7,492	18,684	26,072	34,363	31,252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가계금융복지조사.

<표 A-2> 연령대별 소득·자산·부채 보유가구 비율(%)

전가구 평균	전체	~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가구분포(%)	-	-	-	-	-	-
경상소득(만원)	99.8	99.7	99.8	99.8	99.6	99.9
자산액(만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부채액(만원)	64.3	50.9	70.8	74.5	71.0	47.1
연간 지급이자 및 상환액(만원)	61.0	50.0	72.1	73.6	68.5	38.3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가계금융복지조사.

<표 A-3>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소득·자산·부채 현황(전체가구)

전가구 평균	전체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자영업자	기타
가구분포(%)	100.0	42.7	13.4	25.0	18.9
가구원수(명)	2.9	3.3	2.6	3.1	2.0
가구주 연령(세)	52.7	44.9	54.0	53.9	67.6
경상소득(만원)	4,767	6,211	2,747	5,531	1,925
자산액(만원)	34,246	36,068	13,805	48,086	26,270

전가구 평균	전체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자영업자	기타
부채액(만원)	6,181	6,830	2,481	9,392	3,083
연간 지급이자 및 상환액(만원)	952	1,080	418	1,397	450
순자산액(만원)	28,065	29,238	11,324	38,694	23,187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가계금융복지조사.

다음 표는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소득·자산·부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나라 가구주의 42.7%가 상용근로자이고, 자영업자는 25.0%, 그리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3.4%이다. 가구주 연령은 상용근로자가 44.9세로 가장 낮고, 임시일용근로자와 자영업자는 54세, 그리고 기타 유형에 속하는 가구주가 67.6세로 가장 높다. 경상소득은 상용근로자가 6,211만원으로 가장 높고, 자영업자가 5,531만원, 그리고 임시일용근로자가 2,747만원이다. 자산액은 자영업자가 48,04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상용근로자가 36,068만원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부채액은 자영업자가 9,39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용근로자가 6,830만원이었다. 이자지급액은 부채 규모의 순서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순자산은 자영업자가 가장 많고, 상용근로자가 그 뒤를 이었다.

<표 A-4>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소득·자산·부채 현황(부채보유가구만)

전가구 평균	전체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자영업자	기타
가구분포(%)	64.3	30.9	7.3	18.6	7.5
가구원수(명)	3.2	3.4	2.9	3.3	2.4
가구주 연령(세)	50.3	45.2	52.7	52.5	63.7
경상소득(만원)	5,579	6,502	3,216	6,102	2,787
자산액(만원)	42,208	39,936	17,980	55,171	43,041
부채액(만원)	9,614	9,427	4,549	12,664	7,760
연간 지급이자 및 상환액(만원)	1,359	1,365	697	1,774	948
순자산액(만원)	32,595	30,509	13,431	42,507	35,282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가계금융복지조사.

<표 A-5> 소득5분위별 소득·자산·부채 현황(전체가구)

전체가구 평균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가구분포(%)	100.0	20.0	20.0	20.0	20.0	20.0
가구원수(명)	2.9	1.7	2.5	3.1	3.5	3.8
가구주연령(세)	52.7	65.9	51.9	48.5	47.8	49.3
경상소득(만원)	4,767	862	2,354	3,865	5,791	10,930
자산액(만원)	34,246	11,996	19,322	26,505	37,255	76,135
부채액(만원)	6,181	1,278	3,413	4,642	7,287	14,283
연간 지급이자 및 상환액(만원)	952	192	566	808	1,210	1,992
순자산액(만원)	28,065	10,718	15,908	21,863	29,967	61,852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가계금융복지조사.

<표 A-6> 순자산 5분위별 소득·자산·부채 현황(전체가구)

전체가구 평균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가구분포(%)	100.0	20.0	20.0	20.0	20.0	20.0
가구원수(명)	2.9	2.3	2.7	3.0	3.3	3.4
가구주연령(세)	52.7	54.2	51.7	51.0	51.5	54.9
경상소득(만원)	4,767	2,152	3,257	4,292	5,752	8,380
자산액(만원)	34,246	2,996	10,474	20,944	36,760	100,040
부채액(만원)	6,181	2,212	2,918	4,621	6,727	14,427
연간 지급이자 및 상환액(만원)	952	413	657	826	1,173	1,688
순자산액(만원)	28,065	785	7,556	16,324	30,033	85,613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가계금융복지조사.